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남북교류

최용환 / 통일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목 차

요약

- I.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II. 새정부 대북정책 변화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요 약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획기적인 대북 지원을 제공하여 10년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도와주겠다는 ‘비핵·개방·3000’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이 더디고, 북한 역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무반응 속의 관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쏟아내던 전례와 비교하면 아직도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북미 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구상이 실천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로서는 중앙정부나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업 영역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 한강하구 공동개발, △ 신재생 에너지(Bio Gas) 협력 사업, △ 한-미-북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 황해남북도 및 개성지역 거점 개발, △ 농업현대화 사업 확산 등임

I.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신정부는 북핵의 완전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북측은 무반응 속의 관망을 이어가고 있음.
- 한동안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경색 혹은 소강 국면이 예상된다.

1.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 평화·번영정책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정책은 남북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화·번영 정책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한다. 둘째,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모든 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한다는 것임.
- 하지만 동 정책은 일방적인 유화정책에 그쳐, 북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북핵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2. 신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구상

○ 신 정부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같이 대북정책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그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개방정책'임.

- 신정부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thorough and flexible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신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임. 이는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북한이 개방으로 나선다면, 5대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후 북한을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임

- <비핵·개방 3000 5대 중점 프로젝트>는 ① 경제: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②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③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④ 인프라: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⑤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임

○ 남북관계 관련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 구상임. 즉, 한강 하구에 여의도 면적 10배의 섬을 만들어, 남북경제협력 통한 북한 개방 지원에 나선다는 것임.

○ 이러한 새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북측은 무반응 속의 관

망을 이어가고 있음.

- 한미관계 중시 등에 대해 노동신문이 '1980년대에 이미 쓴맛을 본 (한미 일) 3각 압력공조체제를 또 다시 획책한다면 조선반도 핵문제는 언젠가도 해결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이외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없는 상태임.

II. 새정부 대북정책 변화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 중앙정부나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신모델을 창출하고 우선 추진사업과 중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함.

1. 경기도의 대응방향

-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즉, 남북 당국간 경색기에는 중앙정부와의 공조하에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함.
- 한강하구 공동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합의사항의 준수와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2. 추진전략

1) 한강하구 공동개발

- 한강하구는 대운하의 출발점으로서 신정부에서도 남북협력을 통한 적극적 개발 노력이 예상되는 지역임.
- 경기도는 동 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간 논의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경기도의 입장과 이해를 관철시키는 한편 사업 시행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함.

2) 신재생에너지(Bio Gas) 협력 사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북한 당국의 높은 호응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임. 특히 2008년도에는 중앙정부 및 전북·제주 등 지자체에서 양돈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전망이 밝음.
- 향후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택하고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3) 한국-미국-북한 간 국제 농업협력 프로젝트

- 농업부문에서 종자개량에 대한 북측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함. 미국의 조지아 대학 등지에서 북한과 미국간 시범적인 농업협력사업이 이미 추진되었으며, 한국측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주축으로하여 북한 농업과학원과 미국 대학이 공동으로 종자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적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함.

4) 황해남북도 및 개성지역 거점 개발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황해남북도 및 개성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함.
- 현재 경기도가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산림녹화, 방역·방재·보건의료협력, 사회문화교류, 농업협력 사업 등을 경기도와 접경한 동 지역들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5) 농업현대화 사업 확산

- 경기도의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은 북측의 높은 호응은 물론이고 통일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음. 경기도는 동 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여 북한 농업현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경기도는 북한 농업현대화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기금 등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선도적 대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함.

6) 임진강 수계 관리

- 임진강은 남북 공동수계를 형성하고 있어 홍수 등 재난 관리, 용수 이용 등의 분야에 있어 남북 간 협력이 요구되는 지역임. 홍수 대비 등과 관련하여 남북합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합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임진강 하류 경기도 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향후 임진강 수계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사업 등을 북측에 적극 제안함.